“국가 균형발전 위해 광역별 1건 공공인프라 선정 예타 면제”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 책임 강조…정치 쟁점화 안돼
북미간 북핵 비핵화 절충안 단계적·동시적 방안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 목표를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한반도 평화=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판단하면서 북미간 북핵 비핵화 절충안으로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초부터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정말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간 협상 교착국면을 지나오면서 양측이 ‘절충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 등 핵단지의 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폐기 △미사일 생산라인의 폐기 △다른 핵단지의 폐기 등을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함으로써 북미간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과정을 설명한 후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하는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각 지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고민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급한 ‘광역별 1건’이 전국 17개 시·도별인지 호남권, 수도권, 경상권 등 권역별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규모와 각 시·도별로 제출한 사업 숫자를 볼 때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1건씩의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선정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문제 등을 들어 한 자릿 수 이상의 예타 면제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말 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각각 2~3개 신청했다.

▲김태우·신재민 논란=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현 공직감찰반)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우선 김 전 수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미 수사대상이 돼 있어서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 전 사무관 문제와 관련,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신 전 사무관이 이런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최근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에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과 일본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며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입장 가져야한다고 본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들은 대통령의 선택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나 책을 흔들거나 모자를 드는 등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자신을 어필했다. /연합뉴스

민주 “민생경제 최우선 의지”…한국 “독선적 선언의 연속”

정치권 반응

바른미래 “셀프 용비어천가”
평화 “소상공인 관심 긍정적”

여야 정치권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이자 제1·제2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념의 다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과 정치공방을 떠나 야당도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진보 진영에 속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회견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진일보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정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대통령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며 “정부는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 됐다”면서 “오로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퍼붓기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독선적 선언의 연속일 뿐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자영업자와 청년들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복 입고 모자 들고 휴대전화 흔들고…질문권 얻기 경쟁

이모저모

문대통령 질문자 선정 ‘진땀’
예상 못한 질문에 순간 폭소
“정책 고수 자신감 어디서”
돌직구 질문 적절성 논란도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질문권을 얻기 위한 기자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이날 회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는 미국 백악관 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본관에서 오전 10시부터 28분 남짓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고 5분 뒤에 회견 장소인 영빈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 앉자 마자 곧바로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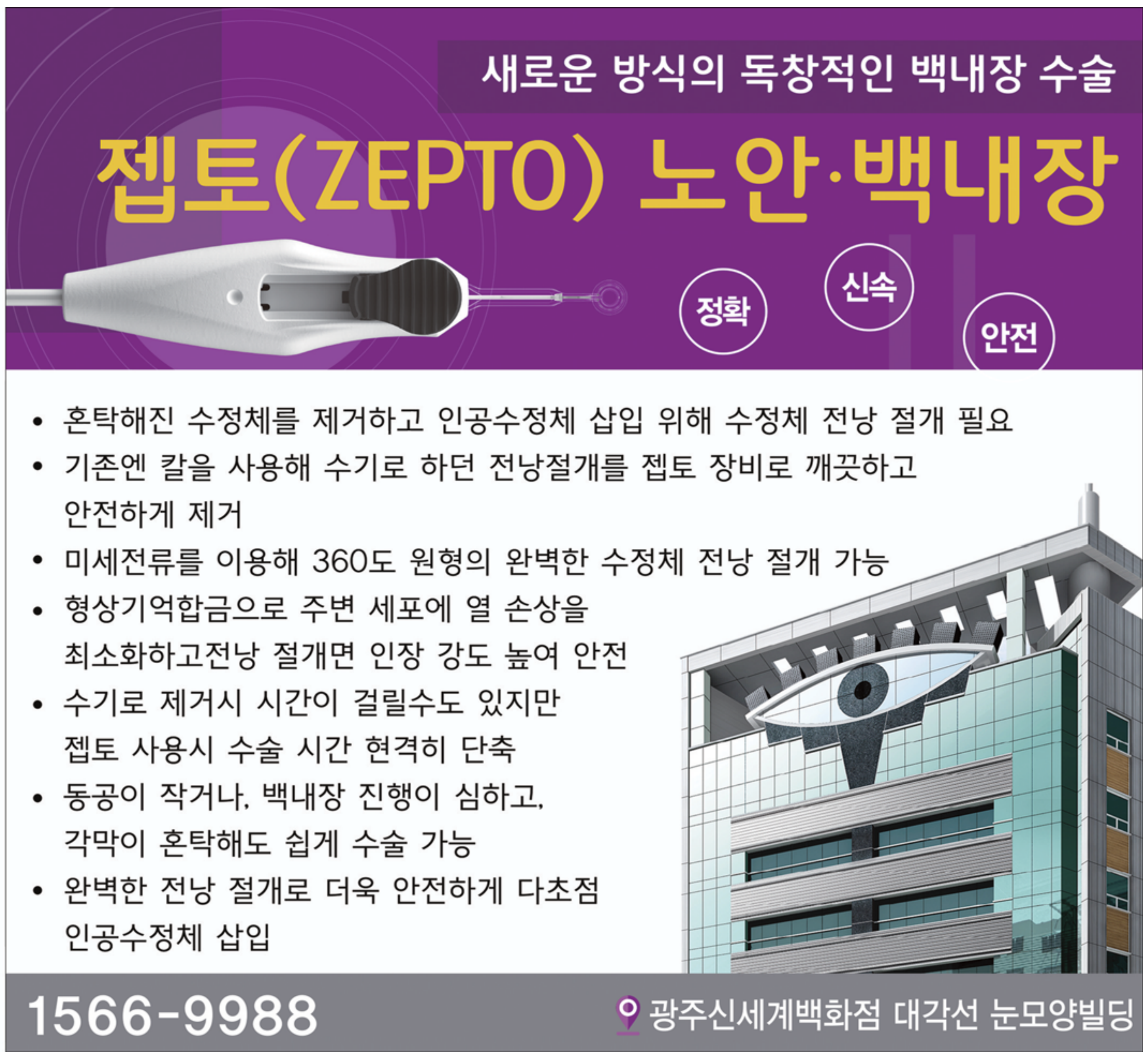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질문자를 선정하는 데 진땀을 뺐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앉은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 중에는 한복을 입고 온 기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 기자들은 핸드폰과 책을 손에 쥔 채 손을 번쩍 들어 대통령과 눈을 맞추고자 했으며 일부는 질문권을 얻기도 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과 답변에는 순간순간 폭소가 터져 나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비교적 긴 분량의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기자가 방안(답)을 다 말했다”고 말해 웃음이 터졌고 외신 기자들의 잇단 새해 인사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날 선 질문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했다.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는 “기자회견문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현실 경제는 얼어붙어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다소 공격적으로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기자 질문의 적절성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교적 막힘 없이 답변을 이어 가던 문 대통령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다소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통해 친문(親文·친문재인) 색채가 짙어졌다’는 언론의 평가를 두고서는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 비서라 친문 아닌 사람들이 없다”며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문일답을 마친 뒤 떠나면서 “언론과 정부는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향해 간다는 점에서 서로 같다고 본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한 팀이라는 생각을 늘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